

# 與 “도덕성 치명상” 패닉...野 “좌파진영 민낯” 공세

**안희정 파문 정치권 강타**  
**민주, 긴급 최고위 소집 제명·출당**  
**안희정서 끝날까...확산 여부 긴장**

더불어민주당 유력한 자기 대권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6일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초대형 악재가 터진 민주당은 발각 뒤집었다. 반면 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여성비하 표현으로 문제가 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거취를 도마 위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미투(Me too)’ 바람이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옮겨 부는 만큼 여파가 어디까지 확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전날 밤 긴급 최고위위원회의를 소집해 안 전 지사에 대한 제명 및 출당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민주당은 이날은 오전에 잡힌 공식 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원내 지도부만 모여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무엇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2위를 차지함으로써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른 안 전 지사가 성폭행으로 형사처벌에 직면하자 충격 정도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이와 관련, 한 중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던 여당의 대표적 차세대 주자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여당도 도덕성에 심대한 치명상을 입게 됐다”면서 “항상 도덕적으로는 우위에 있다고 자부했던 진보진영이 상처를 입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안 전 지사가 명백히 성폭행 혐의를 받는 만큼 그와의 관계 단절 이외에는 별다른 취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민주당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피해자가 방송에 나와 직접 증언을 한 상황에서 잘못되거나 설부른 메시지를 낼 경우 오히려 더 거센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몸을 낮추는 분위기가.

다만,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젠더폭력대책 태스크



안희정 충남지사(오른쪽)가 5일 오전 도청 문예회관에서 직원과의 대화 중 성범죄 피해자의 ‘미투’(# Me too) 운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날 오후 안 지사의 공보비서 김지은(왼쪽)씨가 JTBC뉴스룸에 출연해 안 지사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TF) 주최로 긴급 회의를 열고 안 전 지사 사태 및 성폭력 문제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TF는 안 전 지사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추가 피해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

야당은 공격 수위를 한껏 높였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당 제1회 여성대회에 참석, “곤혹스럽다”며 “민망한 사건들이 좌파진영에서만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겉과 속이 다른 좌파 진영의 이중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자, 민주당의 성 문제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라며 전선 확대를 시도했다.

바른미래당은 성명을 내고 “집권여당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이자 차기 당 대표로 점쳐진 안희정씨가 상습적인 성폭력범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민주당은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대변인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서, 피해자의 용기가 없었더라면 영원히 묻힌 한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방선거 앞둔 광주·전남 정치권도 술렁

**일부 입지자 성범죄 경력 거론 곤혹**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6·13지방선거를 앞둔 광주·전남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다.

후보자 검증 등 공천 과정에 성폭행·추행이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입지자의 성범죄 경력이 거론되는 등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6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도 또 다른 미투가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미투의 파장이 큰 만큼,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지역은 구청장 출마 예정자인 A씨가 성희롱 의혹으로 진실공방을 받고 있고, 전남지역 역시 일부 시장, 군수 후보의 성범죄 경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군수선거에 도전하는 B씨와 시장선거에 도전하는 C씨 등의 과거 성범죄 경력이 지역민에게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미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안희정 전 지사와 직·간접적으로 정치 행보를 함께했던 지역 입 후보자들에게도 불뚱이 튼는 모습이다. 최근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안 전 지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던 광주지역 한 출마예정자는 이날 종일 관련 전화를 받으며 진땀을 흘렸다. 또 출마선언을 앞둔 다른 후보는 같은 당 소속의 안 전 지사 파장이 큰 만큼 출마선언 일자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각 정당들도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 사법 및 각종 의혹과 관련 ‘현미경 검증’을 통해 후보자 심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욱기자 jwpark@오광북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당 ‘악재’ 한국당 ‘호재’ 바른미래·평화당 ‘희망’

**안희정 파문 지방선거 후폭풍**

**박수현 선거운동 전격 중단**  
**충남권 민주당 후보들 유탄**  
**보수층 결집 계기될 지 관심**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의혹이 6·1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지방선거 암수를 기대했던 민주당 입장에서 최대 악재가 만난 것은 확실한 상황이다. 반대로 야당에게 호재임이 분명하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문제는 이 재료가 보수층이나 중도층의 결집을 부를 수는 있지만, 이 결과가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아니면 중도정당을 표방하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에 호재로

작용할지는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일단, 안 전 지사의 영향력이 상당한 충청권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측에 악재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당장 민주당 충남권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이 멈칫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안희정 3선 불출마 선언’으로 충남지사 후보를 놓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양승조 의원, 복기왕 전 아산시장이 경쟁을 벌여왔다.

특히 ‘안 전 지사 친구’를 자처한 박 전 대변인은 안 전 지사의 후광을 업고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왔지만 이번 성폭행 의혹 파문의 유탄을 맞고 선거운동을 전격 중단했다.

학생운동 내선을 내세워 ‘안희정 마케팅’을 펼쳐왔던 복 전 시장도 당분간 선거 관련 공식 일정을 자제하기로 했다. 그간 안 전 지사에게 경선 중립을 요구하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선거운동을 해 온 양 의원은 이날 오전 예정된 기자회견은 했지만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국회의원 충남 천안갑 재선거전에도 영향을 미

쳐 민주당 경선에 나갈 의지를 보였던 안 전 지사 최측근 허승욱 전 충남도 정부부지사도 사건 이후 출마를 원점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장 선거에 나선 안희정계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은 오는 7일 정책공약 발표회를 무기한 연기하고 관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안 전 지사 성폭행 의혹 파문이 확산하면서 낮은 정당 지지율로 고전하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등에 희망이 생겼다는 분위기가.

안 전 지사가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전국구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충청권은 물론 전국적인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보수층 결집이 현실화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완승하고 영남권에 진출해 광역단체장 ‘9+알파(α)’를 확보한다는 민주당의 목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번 파문은 지방선거는 물론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

## 공동교섭단체 결론 못낸 정의당 “당원에 묻겠다” 의총서 격론...당원 여론조사 착수

정의당은 6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의총에서 결정된 내용이 없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2~3일 정도 더 상황을 지켜보야 방향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정의당 소속 의원 6명은 1명씩 차례로 돌아가면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대부분 의원들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강한 찬반 의견을 제시하기보다

저마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의원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당리당락이나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촛불민심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기준으로 평화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제안을 수용할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의당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며 “이 교섭단체가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촛불 개혁의 방향을 확고하게 진전

시킬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3만5000명에 달하는 당원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 절차도 거칠 전망이다.

한편,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성사 가능성에 대해 “70~80%는 기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정의당 내부에서도 ‘주요 정당으로 발돋움하고, 입법 과정에서 노동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교섭단체 지위를 맡아보자’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7부 능선을 넘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용자지원사업 / 선택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이사역력 | 전남대 지질학과 졸, 방송대 중어중문학과 졸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